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 · 강간 · 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834호)
- 조태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841호)
- 양정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25호)

2022.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2
1. 홍익표의원안(의안번호 제14834호)	2
2. 조태용의원안(의안번호 제14841호)	4
3. 양정숙의원안(의안번호 제15225호)	7
III. 검토의견	11
1. 제안취지	11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12
[참고자료]	
1. 국제사회 결의 내용 및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15
2. 주요국의 對 러시아 경제 제재 현황	16
3. 국립국어원 우크라이나어 심의 결과(2022년 3월 7일)	17

I. 제안 및 회부

1.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834호)

가. 제 안 자 : 홍익표 의원 등 46인

나. 제안일자 : 2022년 2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02일

2. 조태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841호)

가. 제 안 자 : 조태용 의원 등 24인

나. 제안일자 : 2022년 2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02일

3. 양정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25호)

가. 제 안 자 : 양정숙 의원 등 39인

나. 제안일자 : 2022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4월 14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홍익표의원안(의안번호 제14834호)

주 문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에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가하고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경을 넘어 침공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 총동원령으로 맞서는 가운데,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고,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의 수많은 침략을 이겨내며 주권을 지켜왔고, 강대국 충돌의 지정학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시민의 생명을 해치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안정, 인권을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러시아의 즉시 철군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정착, 민간인들의 인권 보장 및 난민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어떠한 형태의 무력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강한 연대를 보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과 독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를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군대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지난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러시아가 즉시 군사작전을 비롯한 침략행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2. 조태용의원안(의안번호 제14841호)

주 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에 지지를 보내며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맞서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민스크 협정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번 사태는 평화는 결코 말이나 문서로 지킬 수 없으며, 힘이 뒷받침될 때에만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재 동참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으며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규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침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철수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 등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헌장과 민스크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군이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는 일체의 무력 행동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이 완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불굴의 용기로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투

쟁을 폄하하는 모든 언동에 반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등 경제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 발생 등 시급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정세 혼란을 틈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불굴의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를 러시아식 키예프(Kiev)가 아닌 우크라이나식 키이브(Kyiv)로 표기할 것을 결의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철수를 포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민스크 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해야 함.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강한 연대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3. 양정숙의원안(의안번호 제15225호)

주 문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의 민간인 집단학살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의 무고한 어린이 사상자만 400명이 넘었고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과 고문, 살인 등 러시아 군의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침공 당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세워 현재까지 적극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민간인에 대한 희생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인구 4분의 1이 국내외에서 피란 중인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UN은 이번 사태가 금세기 최대 난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 및 강간, 고문, 살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함.

또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인 철군 및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은 유엔 헌장에 위배이며, 전시 민간인 대학살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직시하고 더 이상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불굴의 용기로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경의를 표하며,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 맞서 싸우다 희생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기억하며,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대학살 행위는 물론, 강간·고문·살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UN 등의 국제기구가 적극 나서서 평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및 UN 인권이사회 러시아 퇴출 추진을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협력체계에 참여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및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지난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되고, 심지어 무고한 어린이 사상자만 400명이 넘어서고 있음.

무엇보다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과 고문, 살인 등 러시아 軍의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로 인해 러시아 軍에 의한 민간인 대학살 행위가 발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의 무력 행위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함.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권 보장과 난민 보호,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신속한 외교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III. 검토의견

1. 제안취지 및 배경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 등에서 동시다발 공격을 펼치며 침공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내 다수의 군사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진군을 펼쳤고, 수도 키이우 인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은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파괴되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민간인 시설 파괴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급증하는 대규모의 우크라이나 피난민¹⁾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등 이웃국가로 국경을 넘어갔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긴급구호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해 유엔, 다수의 국가 및 NGO 등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미국, EU, 일본, 영국, 호주 등 다수의 국가 등이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추가 경제 및 금융 제재를 단행하였으며, 국제기구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 민간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1) 우크라이나 정부가 총동원령을 선포한 관계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은 출국 금지가 되었고 난민 대다수는 여성과 아동임.

이에 세 건의 결의안은 ①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 ② 러시아의 무력행위 중단 및 우크라이나로부터 모든 군대의 즉각적 철수 촉구, ③ 민간인 대학살 행위 및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 ④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과 독립을 존중, ⑤ 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난민 및 사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참여, ⑥ 러시아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⑦ 러시아의 유엔 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존중하는 등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후 수 개월이 지났음을 감안할 때 시의성이 떨어지며 그 동안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조치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각종 성명 발표²⁾ 및 제재³⁾ 등에 동참하고 있으며, 인도적

2) [참고자료 1] 국제사회 결의 내용 및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3) [참고자료 2] 주요국의 對 러시아 경제 제재 현황

지원⁴⁾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⁵⁾ 한편, 러시아 내의 재외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하여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음.

양정숙의원안 주문 제4조는 불법침략과 민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 등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러시아의 유엔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지난 4월 7일 UN은 긴급특별총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근거로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⁶⁾

조태용의원안 주문 제7조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러시아식이 아닌 우크라이나식으로 표기할 것을 결의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은 지난 3월 7일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4) 우리 정부는 총 1억불 규모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및 인근국 피난민 지원을 실시 중임.

○ 4천만불(2월 28일: 1천만불, 4월 7일: 3천만불 지원 발표)

– 우크라이나 지원 2,800만불(900만불 현물, 1,900만불 국제기구)

– 인근국 피난민 지원 1,200만불(국제기구) 지원, 22년 6월 기준 집행 완료

○ 관계부처 우크라이나 지원 1천만불: 국방부, 기재부 등 여타부처가 IAEA, EBRD 등 통해 지원 중

– IAEA 지원 120만불, EBRD 신탁기금(200만유로) 포함

○ 추가 5천만불 지원 중

– 우크라이나 지원 5,000만불(3,100만불 현물, 1,900만불 국제기구)

–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지원 중

– NATO 우크라이나 팬데믹 대응 지원 사업 지원

5)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가 7월 4일-7월 5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되었고 우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에 기여할 것을 표명함(외교부 보도자료, 2022. 7. 5)

6) 전체 193개 회원국 중 175개국이 참여하였고 기권 58개국을 제외한 117개국 중 93개국이 찬성 하였음.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어 지명 14개의 한글 표기를 확정하였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두 표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⁷⁾

조태용의원안 주문 제8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재외국민의 신속한 철수 및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35명이고⁸⁾ 영주권자 등 필수 교민에게 제한적 단기방문을 허용 중에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정보를 공유 중에 있음.

문 의 처
02)6788-5263

7) [참고자료 3] 국립국어원 우크라이나어 심의 결과(2022년 3월 7일)

8) 2022년 8월 1일 현재 기준임.

[참고자료 1] 국제사회 결의 내용 및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일자	회의명	결의안 주요 내용	우리나라 참여 현황
2022.3.2.	유엔긴급특별총회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결의	△우크라이나 주권, 독립 및 영토보전 재확인 △유엔 헌장을 위반한 러시아의 침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및 러시아의 무력사용 즉각 중단 요구 △러시아의 즉각적, 완전한, 무조건적 철군 요구 △인도적 지원 접근 보장, 인권 존중 요구 △대화를 통한 즉각 적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구 등	공동제안국 동참 (찬성 표결)
2022.3.13.	제344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따른 사용자·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안전·생계 및 노동 현장 등에의 영향 우려 △‘러’의 우 크라이나 내 노동권 침해 행위 중단 촉구 △ ILO의 對러 기술 협력·지원 중단 등	공동제안국 동참 ※ 우리나라는 표결권 없음
2022.3.24.	유엔긴급특별총회 우크라이나 인도적 상황 결의	△민간인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공격 등 심각한 인도적 상황 개탄 및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에 대한 적대행위 즉각 중단 요구 △민간인, 필수적 민간시설에 대한 완전한 존중 및 보호 요구 △신속하고 안전한 인도지원 접근 허용 등 의무 준수 요구	공동제안국 동참 (찬성 표결)
2022.4.7.	제76차 유엔총회 (긴급특별총회)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공동제안국 동참 (찬성 표결)
2022.5.12.	제34차 인권이사회 특별회기	△우크라이나 주권, 정치적 독립 및 영토적 단일성 지지 재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 발생 우려 △ 우크라이나 내 인권침해·국제인도법 위반 행위 강력 규탄	공동제안국 동참 (찬성 표결)
2022.10.12.	유엔긴급특별총회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유엔헌장 원칙 수호	△우크라이나 주권, 독립 및 영토보전 재확인, △‘불법의 소위’ 주민투표 및 불법병합 시도 규탄, △불법병합시도는 국제법상 무효, 영토 귀속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선언, △러시아의 즉각적, 완전한, 무조건적 철군 요구, △불법 행위에 근거한 영토귀속변경 승인 자제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지 촉구 등	공동제안국 동참 (찬성표결)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2022. 11. 2)

[참고자료 2] 주요국의 對 러시아 경제 제재 현황

조치		한국	미국	EU	일본
금융		러/벨 은행 SWIFT망 배제 ※ (러) VTB, Otkritie, Sovcombank, Novicombank, PSB, Rossiya Bank, VEB(3.12., 7개 은행), / Sberbank, Credit Bank of Moscow, Russian Agricultural Bank(6.14., 3개 은행) ※ (벨) Belagroprombank, Bank Dabrabyt, Development Bank of the Republic of Belarus(3.9., 3개 은행)/ Development Reconstruction Bank 추가(6.14., 1개 은행)			
		러 은행 8곳 및 자회사, 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중단(3.1., 3.7.) 러 국고채 투자 중단(3.1.)	러 은행 8곳 및 자회사,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 러 직접투자자금 제재·거래 금지 러 국고채 매매 금지	러 은행 8곳, 중앙은행 제재·거래금지 러 국고채 매매 금지 러 정부, 국영기업, 금융기관 일부의 EU자본시장 접근 차단	러 은행 11곳, 중앙은행 자산동결·거래 금지 러 국고채 매매 금지
수출통제		전략물자 대러 수출허가 거부(2.28.) 57개 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허가 거부 (2.28. 발표, 3.26. 시행)	다자수출통제품목, 저사양품목 원료물질, 특정핵물질, 부산물, 중수소 목제품, 선반기, 보일러, 식품, 의약품 등 소비재·공산품 무기생산 관련 화학·생물 물질, 양자컴퓨터	첨단 핵심기술품목, 군용 및 이중용도품목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품·기술 화학물질 석탄, 전자부품, 항공기술품목, 소형무기	다자수출통제품목 (200여개) 및 반도체 등 하이테크 품목(57개) 첨단물품(양자컴퓨터 등) 화물차, 덤프트럭 등 화학제제의 원료 물질 및 제조 장치, 부품
		군사최종사용자 (총 145곳)向 수출허가 거부	군사최종사용자·관련기관 (총 317곳)向 수출허가 거부	-	군사최종사용자(49곳), 국방부 등 단체(121곳), 특정단체(86곳)向 수출금지
		-	원유 정제기술 수출통제	원유 정제기술 수출금지	원유 정제장비·촉매 수출금지
개인·기관 (자산 동결, 압국 금지 등)		-	개인·기관 1,800명(곳) 이상	개인·기관 1,300명(곳) 이상	개인·기관 1,100명(곳) 이상
기타	최혜국대우 철회	-	MFN 철회(4.7.)	MFN 철회(3.15.)	MFN 철회(4.21.)
	영공 폐쇄	-	러 항공기 영공 진입금지(3.2.)	러 항공기 영공 진입금지(2.28.)	-
	선박 조치	-	러와 연계된 선박 입항 금지(4.28.)	모든 러 선박 입항금지(4.16.)	-
	수입 금지	-	러産 석유 수입 단계적 금지 또는 감축 계획(5.8. G7 정상회의) 유가상한제(12.5. 시행 예정)		
에너지(석유, LNG, 석탄) 해산물, 보드카, 다이아몬드			해상운송 원유 석유 제품, 러産 석탄, 고체연료, 철강 목재, 시멘트, 비료, 해산물, 주류, 금 등	단계적 석탄 수입 중단·금지 주류, 목재, 전자기계류 38개 품목 주요 수입품 추가관세 부과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2022.11. 2)

[참고자료 3] 국립국어원 우크라이나어 심의 결과(2022년 3월 7일)

구분	로마자 표기	원어명 표기	한글 표기		비고
			우크라이나어 표기	관용 표기	
1	Azov해	Азовське море	아조우해	아조프해	우크라이나어명 표기 추가
2	Berdiansk	Бердянськ	베르단스크	-	신규
3	Boryspil	Бориспіль	보리스필	-	신규
4	Boryspil 국제공항	Бориспіль 국제공항	보리스필 국제공항	보리스폴 국제공항	우크라이나어명 표기 추가
5	Dnipro	Дніпро	드니프로	-	신규
6	Kharkiv	Харків	하르키우	하리코프	우크라이나어명 표기 추가
7	Khmelnyskyi	Хмельницький	흐멜니츠키	-	신규
8	Kramatorsk	Краматорськ	크라마토르스크	-	신규
9	Kyiv	Київ	키이우	키예프	우크라이나어명 표기 추가
10	Lviv	Львів	르비우	리비프, 리보프	우크라이나어명 표기 추가
11	Lutsk	Луцьк	루츠크	-	신규
12	Odesa	Одеса	오데사		원어 수정(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
13	Siverskyi Donets 강	Сіверський Донець 강	시베르스키도네츠크강	도네츠크강	우크라이나어명 표기 추가
14	Vinnytsia	Вінниця	빈니차		원어 수정(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2. 3. 11)